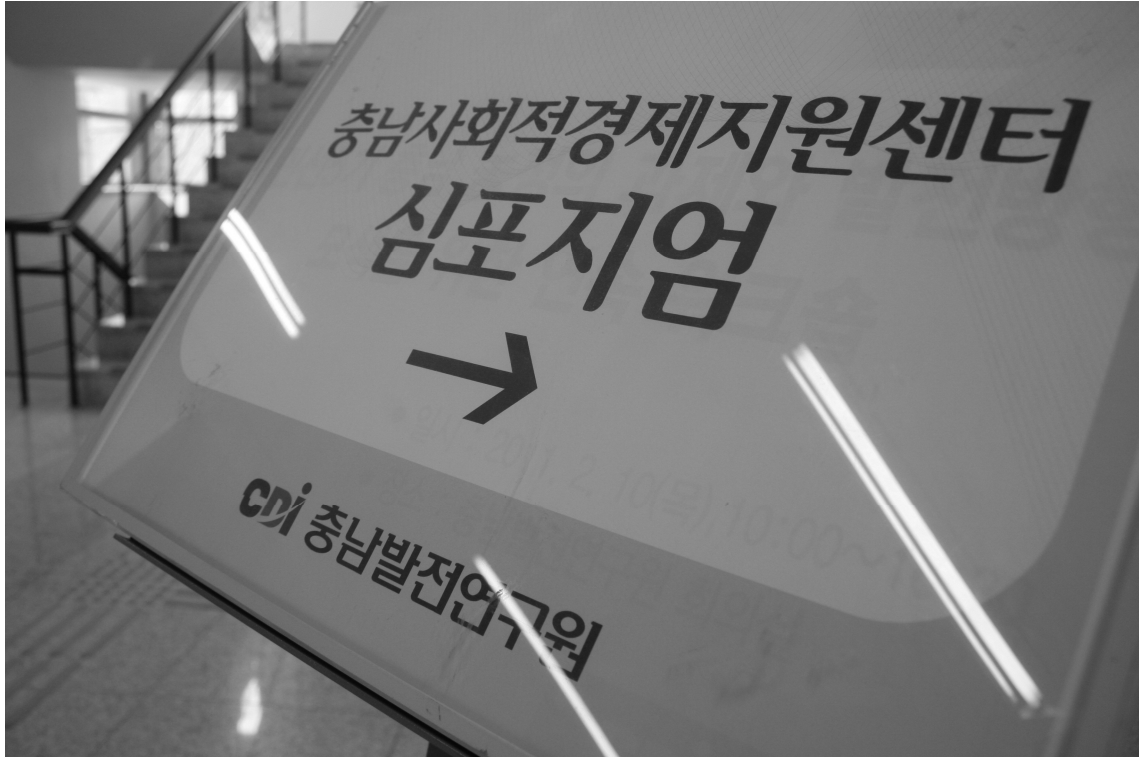


심포지엄 토론결과







심포지엄 토론 결과(요약)

권희태 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낙오 계층에 대한 지원에 일정부분 공감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 ▶ 지속발전을 위한 시장을 어떻게 열 것인가? ▶ 이은애 단장의 사회적기업의 오해와 진실에 공감 ▶ 사회적경제센터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계, 다양한 기관 조정 및 조율에 초점 - 중간 지원기관 ▶ 기업가를 어떻게 발굴하며, 사업가에 대한 자극을 어떻게 줄 것인가? ▶ 리더를 발굴하며, 사전교육 및 안내가 센터에서 선행되어야 함 ▶ 포럼구성 등을 통한 저변확대 ▶ 판로문제에 대한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구매는 제도상 어려움 - 오사카사례는 현행법상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움 -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욕구 조사 및 다양한 이해 조절 기제필요 ▶ 판로 확보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 ▶ 사회적 기업 성공모델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사업자들이 진입용기를 갖도록 해야 할 것
유정규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이 성립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속성으로 사회적기업의 논의가 진행됨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함 ▶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및 사회적 기업 방향 관련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 ▶ 충남형사회적기업관련 사회적기업의 유럽과 미국, 동아시아 지역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자본주의가 발전한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 폐해와

소비자 배려에서 시작,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등을 사회적 경제 범주에 포함

- 미국: 자산적 기업가, 윤리적 기업가 등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서 사회적 경제를 발전 시킴, 사회적기업가를 강조
- 한국: 유럽의 전통적 사회적 경제 이해와 미국의 현실적 관점을 도입

▶ 화폐적인 부분만 추구할 것인가? or 비화폐적인 부분도 포함할 것인가?

- 미국: 화폐적 부분추구
- 유럽: 화폐적 부분+비화폐적 부분추구
- 한국: 화폐적 부분+비화폐적 부분추구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화폐적인 부분만 보고 있으므로 비화폐적 부분도 포함해야 할 것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사회적기업의 수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 사회적기업가 양성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문제
- 중간지원조직역할 육성

▶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킨 후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 현재 진행 방식은 홍보절차→심사→지정 ⇒ 화폐적 부분 강조

▶ 다양한 정책들을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 깔때기역할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 사회적 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마련하나?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공공기관 우선 구매권
- 이런 제도를 시행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문제
- 의지가 있으면 도청에서 하는 일부터 우선해야함

▶ 이윤배분제한규정을 충남실정에 맞도록 어떻게 유연하게 적용할 것인가?

- 영농조합법인 등 법인들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기 어려움

▶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가이드 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하면 이에 따른 시설 비용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대한 인식) - 보조금의 경우 다른 단순보조와는 성격이 다름, 시장형성과 연계 -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수지균형에 대해 센터에서 인식개발
<p>김제선 이 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의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 센터는 단순히 지원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고 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반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 - 순환과 공생의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이 불가피한 일이며,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도구로써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단기적 실적이나 건수를 평가하는 것은 아님 - 내생적 지역 발전위한 패러다임전환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 필요 - 도전체의 산업전반의 정책으로 고민 ▶ 공동체적 기반을 어떻게 갖느냐? - 충분히 숙성되고 준비된 공동체기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음 - 주민역량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느냐에 포커스를 맞춰 고민 - 지역주민의 역량개발 ▶ 사회적경제의 유력한 조직모델은 협동조합 내지 자주관리 모델 - 상법상 주식회사가 가장 간편함 - 협동조합기본법이 없어 이해와 참여가 어려움 - 노동자협동조합, 주민 스스로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생활협동조합의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도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 ▶ 지역화폐 강화 -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 부족 - 지역화폐는 공동체기반을 강화, 전통적 협동경제기반을

	<p>흡수하며 사회적 경제유통망을 만드는데 유력, 로컬 푸드 방식거래 촉진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폐의 모델을 만들어야함 - 협동조합의 문제와 지역화폐에 대한 고민 필요 - ex) 복지적 수단으로 자원봉사 교환지원 ▶ 창업모태지원가정 만들기 - 충남형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탈락한곳을 집중지원, 컨설팅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곳을 찾아가 사업의 기본적 착수나 사업화 하는 과정을 연마·숙성하는 과정을 지원 하는 것이 중요 - 선주체화 후지원 ▶ 중간지원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 -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자활기관 활용 ▶ 지속가능한 운영능력구축 - 충남도내 안정적인 독립기금 마련 - 도 단위에 수요계층별 접근 필요
<p>김성훈 이 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역할 - 도시의 경우 유력한 공동체는 교회공동체와 복지기관 ▶ 중간지원조직역할 - 선정된 다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쓰거나 연구하고 지원하고자하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 ▶ 예산편성 문제 - 경제구조의 문제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가 1주1표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대다수 -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계속생기고, 권력의 문제에서 소외되는 경우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의 영역에서 개인적 경제가 아니가 사회적 경제를 이야기 - 민간차원에서 조직화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과제 ▶ 돈을 누가 만드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을 누가 만들어서 발행하고 유통시키느냐에 대해 새롭게 지역화폐 운동, 즉 돈을 모으는 운동을 해야 함 - 대표적 형태로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 사회적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회적 회계를 성과 기준에 넣어서, 활동들이 얼마나 공공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이었는지 평가하는 틀을 만들어야함 ▶ 사회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의 문제 -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 전문가들이 사회적 변화의 의지가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조건과 기회마련이 중요 ▶ 지역경제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략과 네트워크,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권이 바뀌면서 복지관련 연대 체제들이 없어져버림,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네트워킹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음 ▶ 법률적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며, 법률관련 문제를 연대해서 같이 풀거나, 지자체이 법률적 개선 필요
<p>박찬무 대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거운 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형사회적기업1호 - 자활공동체에서 시작 - 올해 천안시 결식아동 10억 위탁계약 , 마사회 2억 위탁계약 ▶ 자활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공동체가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지면 바로 지원이 중단 - 사회적기업의 지정 또는 인증에 대한 고민 - 충남지역의 자활센터 15개, 자활공동체 68개, 예비공동체 단계, 즉 자활근로 134개로 이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 -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를 내실화하지 못함 - 이 부분을 내실화하기위해 광역자활센터 필요성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7개의 광역센터가 운영되며, 성과가 높음 ▶ 정부보조금을 활용수단으로 활용하지 말 것 ▶ 사회적 가치or사회적 경제or 사회적 기업에 대한 방향이 다름 -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주체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 ▶ 협의회구성 - 스스로 돈을 내고 인력을 내서 활성화하기 ▶ 세무처리 - 국고보조금을 받아 부가세를 냄 -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계산서라든지, 부가세가 제외되는 부분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 ▶ 시군별 인프라 구축 ▶ 작년 천안에서 각계계층의 30여 명이 모여 교육받음 - 4회 정도 교육 후 큰 지역에서 큰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후, 시민주주방식의 사업체를 만들었음 - 20여 일 간 백만원~오백만원까지의 돈을 걷은 금액이 1억 800만원으로 희망칼국수 오픈 - 이런 사례를 통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이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1일부터 사회적 기업 지정 ▶ 센터장에게 부탁 - 재화, 서비스에 대한 공동마케팅 - 부스활용, 소비자 초청을 통한 축제 겸 마당 제공 - 성공한 기업체들과 자매결연이라든지, 프로보노제도 활성화 ▶ 도에 부탁 - 지자체는 사회적 기업들의 열기와 성원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지자체의 관심부탁
채수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을 통해 체험학습이 의무교육 - 학생에게 체험재료 무료보급의 길 만들어 주길 - 마을기업 신청
김성기 박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념 분명히 - 취약계층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공동체 경제개발이라는 이념을 분명히 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생협이 가장 지속적 - 안성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 한국의 경우 흑자가 나는 조합원수는 2천세 대 정도 - 의료생협은 내부적으로 판로를 획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있음 - 정책에서 지원 →협동조합방식 ▶ 공공시장에 대한 블루오션전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장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함
이은애 단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화폐적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 ▶ 연대경제를 위해, 자발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민 섹터 안에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중요
권희태 실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폐적 가치와 비화폐적 가치를 같이 봐야한다는 의견에 동의, 현실적으로 한계,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야할 숙제 ▶ 부처 간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부처별로 해결되고 있지는 않음 ▶ 자활공동체의 경우 보조금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유형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고민 ▶ 사회적기업법은 있지만 법이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면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여야 공공구매로 이어질 것 ▶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확대를 위한 포럼의 기회제공 ▶ 협동조합이나 지역화폐문제는 시군차원에서 핸들링 해야 효과 있을 것이며, 도에서도 일정부문 지원 ▶ 창업모태지원가정이나 탈락한 조직을 다시 인큐베이팅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일 센터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 ▶ 사회적기업과 시민사회단체도 사회적 스스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야 함

심포지엄 토론 결과(전문)

〈권희태 실장〉

시장낙오계층에 대한 지원에 일정부분을 공감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지속발전을 위한 시장을 어떻게 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럼을 만들어 저변을 확대할 것이다. 판로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공공구매는 제도상 어려움이 있다.

이은애 단장님의 말씀의 오사카사례는 직접도입이 현행법상 적용하기 어렵다. 지역 내 사회적기업 우선되도록 하는 법적장치는 없지만 고민해보겠으며, 공공구매는 자영업자들과 마찰할 가능성이 있다. 해결방안으로 사회적 욕구조사 및 다양한 이해 조절 기제가 필요하다.

판로확보 문제는 사회적기업이 산출한 생산물 및 재화를 일정부분 시장에 맡겨야 하며 공공부문에서 어렵지만 공공구매에 대한 노력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지원 센터는 오늘 개소를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17개, 이번 20개, 커뮤니티 비즈니스 22개 계획하고 있는데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많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도록 해야 함.

좌장: 정책담당자로서 고민 및 사회적경제지원 센터에 대한 제언함

〈유정규 이사〉

지금 여론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성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의 속성으로 사회적기업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저의 의견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 진행 방향 의견 및 충남도의 충남형 사회적기업에 대한의견을 말씀드리고자한다.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해

석은 논리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정책 및 사회적기업 방향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필요하다.

김성기 박사의 사회적 공동체 목적을 수행하는 경제적 범주 및 경제적 목적·사회적 가치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지 않고 논자에 따라 또는 유럽, 미국, 동아시아 등 지역에 따라서는 이해의 폭이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정책을 이제 막 추진해가는 우리입장에서 ‘어떤 해석을 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해야 한다. 충남형사회적기업과 관련해 유럽과 미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럽이나 미국의 논쟁점의 차이가 있다. 유럽은 자본주의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한 과정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가져온 폐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소비자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로 시작하였다. 유럽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 민간단체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조직이나 조직행태의 성격이나 내용보다는 자산적 기업가, 윤리적 기업가 등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켰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적기업가를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유럽의 전통 사회적경제 이해와 현실적으로 미국적 관점, 즉 수직균형을 맞추려는 짊뿔된 느낌을 받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화폐적인부분만 추구할 것이냐 비화폐적인 부분도 포함할 것이냐?’로써 미국의 경우 화폐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보며 그렇기 때문에 NPO라도 수직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화폐적 부분과 비화폐적부분을 같이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현 주장은 화폐적부분과 비화폐적 부분을 포함해서 봐야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화폐적부분만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사회적기업의 수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이다. 우리나라의 화폐 중심적 접근을 비화폐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실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해 첨예한 논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문제,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 역할육성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충남형사

회적기업에 대한 제 생각은 비화폐적부분도 충남형사회적기업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충남형사회적기업의 육성에 있어서 첫째, 사회적기업의 토대가 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충남의 이해를 높이는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식을 개선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이 선행된 후에 또는 병행된 후에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작년에 지정된 충남형사회적기업, 올 초 지정하려고하는 충남형사회적기업, 올해 말의 충남형사회적기업지정 예정, 이렇게 하면 올해 60~70개의 충남형사회적기업이 될 텐데 현재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보다는 그냥 홍보절차를 거쳐서 심사하고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비화폐적인 부분은 빠져있고 화폐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이대로 가서는 만족성을 높일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본다.

둘째,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중앙에서는 수도권꼭지가 여러 개 있고, 이에 따라 지역에서 혼란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깔때기로 만들어서 하나의 통에 넣는 역할, 즉 깔때기역할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회적기업이 존립할 수 있는 시장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로 시장형성노력이 중요하다.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공공기관 우선구매권이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려는 공공기관의 의지의 문제로써 의지가 있으면 도청에서 하는 일부터 시장 형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적기업육성을 하기위해 ‘이윤배분제한규정을 어떻게 충남실정에 맞도록 유연하게 할 것이냐?’로 이윤배분제한규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영농조합법인 등 이런 법인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는 유연하게 해석은 하지만 농어촌의 지역의 경우 사회적복지가 도시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이윤배분규정을 어떻게 유연하게 적

용할 것이냐? 의 문제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일중 하나가 ‘사회적기업의 대상을 어떻게 가이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농어촌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간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가이드가 필요하며 시설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 관련하여 특히 우리나라 경우 사회적기업의 수요에 대한 인식이 골치 아픈 상황이다. 예를 들면 보조금의 성격, 사회적 가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단순보조와 다른 문제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용어만 보조로 하여 무조건 공짜로 주는 것으로 하는 개념과 다르게 시장형성과 연계해서 봐야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성과 수진균형에 대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인식시키는 논리를 개발해야한다.

좌장: 공동구매, 사회적기업의 영리문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윤문제, 사회적경제에 대한 용어로 접근하였으며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른 측면도 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김제선 이사〉

한국 행정역사에 사회적경제의 ‘계’라는 것이 자치행정조직에서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사회적경제의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충남형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충남지역의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반을 만들어가는 센터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순환과 공생의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이 불가피한일이며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도구로써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로 일을 해야지, 사회적기업 컨설팅 건수라든지, 몇 개 기업이 살아남았는지에만 초점을 맞춰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할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것은 좋으나 단기적 실적이나 건수를 평가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내생적 지역발전을 하기위한 패러다임전환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유정규이사의 말도 있지만 경제통상실의 정책이 아닌

도 산업정책전반에서 결합되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수익모델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숙성되고 준비된 공동체기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공동체적 기반을 어떻게 갖느냐?’ 주민 역량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느냐에 포커스를 맞춰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원의 초점을 사회적경제의 주체인 ‘주민역량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고민을 가져야 한다. 지역발전이라는 것은 지역의 인적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인데 핵심은 지역 주민을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의 주민역량개발 시도방식이 ‘협동’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발전해보자하는것이 사회경제의 문제의식이다. 공동체적기반을 갖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기업은 상법상 주식회사가 가장 편리하다. 하지만 원래 사회적경제의 유력한 조직모델은 협동조합 내지 자주관리모델의 회사지만, 사회적기업에대한 우리의 생각은 노동자협동조합이지만, 현재는 특수입법형태의 입법협동조합들은 많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없으며, 이해하기도 어려워 참여가 어렵다. 노동자협동조합방식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사회서비스를 생산하는 있는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사회적경제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형식으로써, 협동조합을 잘 만들고 진행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년은 UN이 정한 협동조합의 해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협동조합기본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 도차원에서 그러한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공동체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각 부처의 관심사이지만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지역화폐는 공동체기반을 강화하며 전통적 협동경제기반을 흡수하며 사회적경제유통망을 만드는데도 유력하며, 로컬푸드와 같은 방식의 거래에도 촉진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지역 화폐모델을 작게 돈, 크게 돈 만들어야 한다.

서울은 ‘S머니’ 도입해 복지적 수단으로 하고 있다. 일부 서울자치구는 주민의 직접적 교환수단으로 지역화폐를 고려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화폐를 충남차원에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를 고민해야 한다. 도

단위 복지적 수단으로 자원봉사를 교환하고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도입 하든지, 사회적경제에 걸맞은 형식으로 협동조합의 문제와 지역화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주된 방식이 창업 성숙기의 본격적인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단위들에 지원하는 것을 공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쓸지 모르거나 혹은 공공기관의 돈을 어떻게 쓸지만 계획하고 상품에 대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보조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에 기반이 되는 ‘창업모태지원가정’이라는 것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시작해야한다. 충남형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응모하거나 탈락한곳을 집중 지원하고, 또는 응모하려고 해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곳을 찾아가 컨설팅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지원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서, 사회적경제주체로 키우려면 같이 일할사람을 모으고 모은 사람들이 할 일을 정하고 목적을 공유해서 사업을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 되어야한다. 현재 공모과정에서 준비하는 수준이 낮은 편이므로 대안으로 ‘창업모태지원가정’을 시작했으면 한다. 부족한 상태로 시작된 곳 자체를 지원해서, 사업의 기본적 착수나 사업화하는 과정을 연마할 수 있도록, 숙성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원칙으로 창업모태지원을 시작해야 충남형사회적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며, 주체역량이 커오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지원할 뿐이라는 선주체와 후지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 지역마다 자활기관들이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지속가능한 운영능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내에서도 안정적인 독립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는 광역시권이고, 각 시군에서 계층별접근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수요계층별 접근이 필요하다.

좌장: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집행측면에서의 문제가 있지만, 투명하게 정량화하여 성과를 나오게 하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 지역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

〈김성훈 이사〉

저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역할을 하며, 마을기업관련 실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제 대덕구로 실사를 다녀왔다. 대덕구의 경우 8개 마을기업을 지원하였는데 주체가 목사2명, 사회복지기관 3명, 공동체 성향이 3군데이다. 마을기업이 ‘마을’이라는 개념,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볼 때 ‘도시지역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도시의 경우 유력한 공동체가 교회공동체나 복지기관이 공동체가 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모델을 만들거나, 물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과정이 어렵고 뜻이나 의의가 좋지만 지역사회의 어떤 필요와 만나는지와 연결하는 것이 잘되지 않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역할을 하면서, 선정된 다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도 같이 쓰거나 연구하고 지원하고자하는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의 경우 예산부족의 문제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기본활동을 연구해야한다. 경제구조의 문제의 경우 자본주의 경제가 1주1표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방식의 대다수이다. 경제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계속 생기고 결과적으로 권력의 문제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영역에서 개인적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해야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정치권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회적 경제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들고 운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민간차원에서 ‘조직화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과제가 중요하다. 마을기업·사회적기업도 있고 지역 내 공동체도 있으면서 이런 것이 대형유통자금이나 금융자금에서 뺏기는 구조들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정치에 참여할 것 인가?’라는 부분까지 생각해야한다.

개인적 경제가 갖고 있는 세계의 문제를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세계를 만드는 것 기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만드는 일차적 책임은 본질적으로 시민들, 주민들에게 있다는 자각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

요한 문제는 돈과 관련해있다고 생각한다. ‘돈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요즘 기술로써의 돈, 시대정신, 화폐전쟁 등 책에서 보듯 화폐발행을 사회추구집단이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하면서 생기는 재산을 빼앗아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구조를 우리가 어디까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를 생각해보고 화폐를 누가 만들어서 발행하고 유통시키느냐에 대해서 새롭게 해보는 운동이 지역통화운동 돈을 모으는 운동을 해야 한다.

일부는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보조금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돈을 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운동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끼리라도 돈 오만 원씩이든 십만 원씩이든 내서 활동가들이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표적 형태로 협동조합이나 공제조합이 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비화폐적인 부분의 문제, 사회적기업에서의 평가해야 할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수익을 얼마나 올리었느냐에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기준으로 사회적회계를 성과기준에 넣어서 활동들이 얼마나 공공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이었는지를 평가하는 틀이 있어야한다. 기본적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은 취약계층 국한된 제도적 특성들이 있다.

고용창출 취약계층 30%, 사회서비스 30%, 혼합형 20% ,이며 기타유형 등은 발굴되고 있지 않다. 경쟁의 구조 하에서 사회적기업들도, 먹고사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물론 사회적기업의 의미는 있다. 공공성은 반드시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가 중요한 공공성의 문제이다. 따라서 꼭 취약계층이 아니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 대신에 사회적변화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조건들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하면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중앙경제나 대자본 경제와는 다른 ‘지역경제를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네트워크, 이런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지원돼서 사회적기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한다.

특히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지역사회 복지 협의체라든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이민네트워크 활동을 실시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모였던 연대체제들이 다 없어져버렸다. 실제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네트워킹해서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새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법률적 지위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최초의 법인을 만드는 법률적인 지위문제는 협동조합기본법이나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며, 또 하나는 생산하고 만드는 과정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뭐든 만들려면 제조업 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허가를 내기위한 최초의 기반을 만드는데 자본이 너무 없거나 관련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내놓는 것들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연대해서 같이 푸는 방법을 세워주든지, 실제 이런 문제라는 측면을 지자체에서 법률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박찬무 대표〉

즐거운 밥상은 도시락을 만드는 곳으로 항상 자랑스럽게 즐거운 밥상이 충남형사회적기업 1호라고 말하고 다닌다. 올해 천안시와 결식아동 위탁계약이 금액이 10억 정도이고 마사회와 계약을 맺어 간식 납품 건이 2억 정도 된다. 그런데 두 가지 계약 건에 있어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즐거운 밥상은 자활공동체이다.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자활공동체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안시 결식아동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노력하였던 것은 사회적기업의 공신력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천안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거는 자활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다. 이전에는 자활공동체라는 지정서를 가지고 지원을 해도 안됐었는데, 올해는 되었다. 이 얘기는 공무원이 한명 바뀌니까 그런 일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로써, 이것은 많은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다. 이것을 계속 부수려고 노력하고, 지원센터에서도 노력 하겠지만 저희도 같이 노

력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해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 스스로도 능력도 있어야하지 않나 생각을 했다.

실무적 이야기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자활공동체를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지면 바로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다. 공동체 창업을 하는 동시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자립구조를 만들기 어려우니까 사회적기업의 지정 또는 인증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활공동체를 사회적경제 속에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설명하기가 쉽다.

정책적 방향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려는 부분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충남의 지역자활센터가 15개 있고 자활공동체가 68개정도 된다. 예비공동체단계, 즉 흔히 자활근로라는 것이 134개 있고 여기에 1,4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자활근로나 자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고 그들이 사업단으로 만들어졌고, 공동체로 있는 부분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본다. 지역자활공동체에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를 내실화하고 있지 못한다. 그런 부분을 내실화하기위해서 광역자활센터의 필요성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미 전국에 7개 광역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자활이 다른 곳보다 굉장히 성과가 높은 편이다. 그런 성과들이 사회적기업화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가능성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사회적 가치실현보다는 정부 보조금으로 어떻게든 조달하기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현재는 사회적가치 또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양이나 자신이 바라보는 방향이 너무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한 방향으로 보고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 주체를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주체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들은 협의회를 빨리 구성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스스로들이 돈을 내고 인력을 내서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또 세무처리하면서 해결하고 싶은 부분인데 도시락대금은 국고 보조금인데 저희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부가세를 낸다. 사무처 규정을 찾아보면 세금계산서를 안 받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일반매출은 아니더라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라든지 부가세가 제외되는 부분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하면 운영에 도움이 되고, 좋은 상품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본다. 각 시군·구별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는 지원센터장님이 안내해주셨으니까, 빨리 해결되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천안에서 작년에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에 대해 학습을 받아보고자 해서, 지역에서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았는데 30여명 정도가 모였는데 여기에는 정치인,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사회적기업가 등 있었는데 4회 정도를 교육받았는데 김성훈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큰 지역에서의 큰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시민주주방식의 어떤 사업체 법인을 만들자 하고, 20여 일간 금액모아서 일억 팔백만원정도를 모았다. 백만원에서 오백만원까지만 해서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사회적기업 비슷한 것을 만들자고 해서 희망칼국수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민한 부분들의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천군귀농인협의회 이상무〉

저희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센터장님께 부탁의 말씀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했을 때 판로가 어려우니 공동마케팅에 대해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KT연수원에서 했던 방식의 부스활용, 사회적기업의 처음 시작하는 곳을 한곳에 모아 소비자들을 초청해서 축제를 겸한 마당을 만들어주셨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과, 그 다음에는 성공 기업체들에 어떤 자매결연의 형태라든가 프로보노제도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히 현장에서 필요하다.

도청에 대한 부탁은 이러한 열기와 성원이 지자체에서는 전혀 다르게 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가까운 지자체에서 담당자가 서류만 받아 행정처리만 하는 수준이지, 담당과장님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은 다른 지자체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연공예체험관 채수범〉

10년간 공예작품을 하면서 3년 전 교과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자체, 교수, 원장 및 학교 선생님들이 인정한다면 충청남도 도 차원에서 교육부 쪽으로 올리면 예산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아이들 체험재료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사회적기업을 통해 우리가 지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쪽으로 교육제도가 체험이 의무화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체험재료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충남사회적기업에서 선도 주자로 나서서 보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시군단위로 조성해주길 바란다.

〈김성기 박사〉

유정규 선생님과 김제선 선생님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취약계층 고용창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공동체 경제개발이라는 이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결국은 단순히 고용지원 프로젝트가 정책프로젝트 내용의 전부가 아니라, 실제 공동체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젠다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성문제’도 중요한 토론과제인데 이와 연계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수지균형을 0을 맞추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기업에서의 회계와 같은 논리로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사회적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은 의료생협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생협은 수요와 공급을 내부 안에서 결정한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에서 흑자가 나는 조합원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2,000세대정도면 흑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안성의료생협이나 안산의료생협 등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판로를 획득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전략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복지서비스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을 세운다는 어젠다를 할 때, 협동조합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정책어젠다를 쓰는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사실 모든 사회적

기업이 이것만으로 안되는 게 문제인데, 사회적 문제측면에서 공공시장에 대한 블루오션전략이 필요하며, 일반기업들과 당연히 충돌하는 부분이 나오고, 이 부분에서 지자체장들이 결단해야한다. 정책이념의 실현이라는 정책 결정 선택의 차원에서 결단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도와 기초지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이 현물, 현금 상당히 많다고 생각한다. 남양주시 예산분석을 했는데 일반회계 5천억을 분석했는데 사회적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6백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시장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을 개발하는데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은애 단장〉

보완하고 연구할 부분은 비화폐적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들, 그리고 사회적경제무역이 성장하면서 지역단위의 화폐적, 비화폐적 교환의 관계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경제조직을 평가할 때 주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포괄하게 되면 소비를 줄여주는 다양한 방식들을 적정한 소비운동이라는 것 그런 개념을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개념을 포괄해서 고민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를 말할 때 기존의 영리 경제조직들 안에서 경제원리 즉,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적정성의 경제를 늘 이야기하는데 적정한 고용규모, 적정한 매출방식, 적정한 수익성, 적정한 분배방식 등 이런 적정성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라는 생각한다. 현실에서 정책으로 나오기보다는 현장에서 어떻게 합의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이라 봐서 그런 과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갈 것이고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상담에 결합을 했었는데 농업법인의 경우 행정적 어려움, 사업개발의 어려움, 흩어져있는 자원들을 자원으로 동원해서 내는데 어려움을 충분히 보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저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신에 시민들의 사회적 책임 이런 부분도 시민 안에서 이야기 할 때가 되었고 우리 스스로 조차도 공공자금이라든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눈먼 돈 취급해왔던 태도들을 우리부터 깨나갈 필요가 있다. 연대경제를 위한 소중한 사회적 자산으로 보아야하며, 자발적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시민섹터 안에서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권희태 실장〉

유정규 이사님이 말처럼 과연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봐야할 것이냐, 자본주의폐해를 보완하기위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 거기에 미국식으로 기업을 객관적으로 봐야할 것인가, 화폐적 가치와 비화폐적 가치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체적어젠더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공무원입장에서 한계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취업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기업을 공동체적 가치로 하고 사회적가치만 추구하는 쪽으로 개념 짓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수용하기는 어려움으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야하는 숙제가 아닌 하는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도정전체에서 봐야할 것이고 부처 간, 부서간의 칸막이 처진 이기주의를 버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 또한 부처별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갈때기형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부처에서 보조금을 시도에 시달하면 보조금 집행상황을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그것을 목적 외 사용하면 그것은 공무원이 신분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떻게 코디네이터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사업, 일부 사회적기업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 부분도 여러 부처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매일 자체적 토론을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처음 태동 되었을 때 보건복지부, 농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제산업부, 필요하면 건설교통부까지 포함해서 사회적기업화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준다던지 재화나 용역을 납품받을 수 있는 곳을 발굴 하자는 이야기는 하지만 현재는 잘 되지는 않지만, 지사님께 잘 전달하겠다. 자활공동체도 나왔습니다만, 자활공동체를 2009년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는 순간 보조금

지금이 금지되고, 운영이 부실한 자활공동체도 있어 전환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보조금을 수입으로 하는 사업유형을 만들 수 없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시장과 관련해서 사회적기업법은 있습니다만, 법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구매 측면에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제공하는 용역이 다른 일반기업체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이 되면, 강력하게 강행할 수 있지만 현재는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되고 있고, 가격 면에서 품질 면에서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하지 않으면 강제적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를 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자체에서 가격과 품질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키고 이것을 '사회의 내발적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하다는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한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주요과제로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포럼이라던 가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김제선 이사님의 협동조합 문제와 지역화폐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도차원에서의 핸들링 하는 것 보다는 시군 차원에서 핸들링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일정부분의 지원이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숙제로 가져가겠다. 중요한 부분 창업모태지원가정을 운영해야한다는 것, 탈락한 조직이라던지 사업가들에게 다시 인큐베이팅하여, 다시 이해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과정은 매우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송박사님께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김성훈 이사님의 말씀처럼 사회적기업도 이제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일정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출현해서 중간지원기관을 지원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를 보조한다던지, 또는 사회적기업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내공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던지, 사회적기업과 시민사회단체도 사회적 스스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졌으면 한다.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느슨하게 하는 경우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동을 거는 부분이 있어 이해바라며,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제 나

름대로 많은 고심과 중앙정부와 각 부처에서 지원도 있지만 도 자체에도 없는 예산을 상당부문 빼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다.

시군에 전담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담조직을 만들지 못하면 전담 공무원이라도 만들 것이며, 공동마케팅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매촉진시책법과 연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채수범님 말씀은 유치원 무료제공은 만5세아 무료제공과 관련해서 납품 길을 터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육청과 연계하도록 검토하겠으며, 취약계층에 국한하지 말고 이것을 확산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은 송박사님께서 잘되는 시·군부터, 천안·아산 당진 등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장을 만들면 될 것이다. 이윤배분제한규정의 유연성 확보방안은 알아보도록 하며, 오늘 하신말씀들은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하도록 하겠다.

〈유정규 이사〉

비화폐적부분을 포함해서 수지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화폐부분을 어떻게 회계에 포함시킬 것인가?’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 회계, 사회적 회계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것을 포함해 수지를 맞추는데 그것만 빼버리고 화폐적부분만하고있어, 원래 목적과 다르게 회계를 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그런 사회적경제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전제 돼야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경우 보조금이 없어도 존립할 수 있는 기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보조금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다르게 보아야하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장으로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켜 순계 해야 하지 그것을 빼고 수지균형을 맞추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논리를 연구자나 사회적경제에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권희태 실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논리적 근거나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고 현재 상황에서 즐거운 밥상처럼 결식아동에 대한 도시락지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김제선 이사〉

공공분야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송박사님께 너무 많은 숙제를 드려서 죄송하고 창업모태지원가정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원바라며, 우리도 모여서 ‘충남손보산업’ 같은 것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희태 실장〉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농업재해보험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으니 김제선 이사님께서 한번 시도해보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성훈 이사〉

지역통화에 대한 말을 하고 싶다. 초창기에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부딪혔던 부분은 지역화폐 가입을 권유하면 거의 하시는 분이 없다. 그렇다하더라도 가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가입하고 또 가입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시장경제질서에서 우리가 길들여진 것은 이기적으로 거래해야 이익이 된다는 것으로 부터 모든 관계방식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실 사회적 경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극복해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사회적 책임의 문제인데 사회적 책임은 돈 있는 사람만 지는 것은 아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면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갔으면 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2001년 세계사회포럼에서 시작하였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세계화된 자본주의경제질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 세계 시민사회와 NPO들이 내렸으며 다른 세계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경제에서 연대경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민참여예산제도 등 이런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일 년 내내 지역사회주민들이 축제처럼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